

역사교과서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처의 교육개혁을 他山之石으로 생각할 때

안 병 훈 (서울평화상 심사위원)

보수-진보 진영간의 역사전쟁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전국 고등학교에서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문제를 놓고 보수진영과 진보진영 간에 가히 역사전쟁이라 불릴만한 큰 논란을 벌이고 있다. 그 이유는 현행 교과서가 좌편향되었다고 하여 불거진 이 논란은 단순히 학술적 문제에 머물지 않고 국가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와 깊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10여 년 동안 끌어온 논란 끝에 최근 우파정권인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수정권고안이란 것이 사실상 교과부가 좌편향교과서 집필진들에게 백기(白旗)를 드는 결정을 함으로써 이 싸움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느낌이다.

안병만(安秉萬) 교과부 장관은 지난달 교과부 국정감사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한 부분이 있다”고 전제, “우리 학생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을 배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수정의사를 분명히 했었다. 또한 교과

부로부터 현행 교과서 분석을 의뢰받은 국사편찬위원회도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시각이 아닌 대한민국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돼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오랜 기간 침묵으로 일관해오던 정부가 방침을 뒤집는 것이어서, 사회 각계로부터 큰 기대를 모아왔었다.

그런데 막상 교과부가 최근 현행교과서가운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북한의 실상을 미화 한 부분 등을 고치겠다고, 55개 항목을 추진 수정권고안이란 것을 마련, 발표했으나, 그 조치의 형식과 내용들이 대부분 “교과부의 몸사리기”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자, 논란을 벌여 온 양측으로부터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동안 줄기차게 역사교과서의 전면개편을 주장해온 세력들은 “태산 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하나 마나한 것,” “임시방편의 땀질메 우기식,” “도둑에게 창고를 맡긴 격”이라며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반응은 교과부의 수정권고안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입각한 수정을 내세우면서도 반드시 고쳐야 할 부분은 피해가고 많은 문제부분에 대해 자구수정 정도의 권고를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정지시도 아닌 수정권고조차 집필진들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자체수정이 미흡할 때에도 교과부로서는 강제수정은 시키지 않겠다고 해, 교과부 장관의 수정명령권 운운하던 그간의 입장에서 후퇴해 버렸다.

반면에 그동안 교과서포럼 등의 비판에 소극적으로 대해오던 현행 교과서집필진은 물론, 전교조등을 비롯한 좌파세력들은 교과부의 조치가 의외로 미온적이라고 보았던지, “교과부가 신중을 기했다”고 빈정대는 평을 내놓은 후 오히려 조직적인 반발을 벌이려는 형국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제작, 사용되기 시작하여,

시비가 발단된 고교 역사 교과서문제는 우파정권인 이명박 정부 때에는 반드시 고쳐 질 수 있으려니 하고 기대하던 많은 국민들은 “교과서도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며 실망감을 표시하고 있다

검인정 6종 보조교재 1종등 100%가 좌편향

고교 역사 교과서의 좌편향문제는 1996년도 <국사>교과서 개편을 위한 시안 작성시기인 1994년에 이미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그것이 본격화된 것은 2002년 김대중 정부 때 제작되어, 2003년3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전국 고교에서 교육되기 시작한 ‘한국근현대사’ 검인정 교과서 6종이 발간되면서 부터이다. 이 검인정 역사교과서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선택과목으로 제시된 것으로, 금성출판사, 법문사, 중앙진흥연구소, 천재교육, 대한교과서, 두산동아 등 6개 출판사에 의해 발행되었고, 6종 모두가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나, 그중 너무 심하게 좌편향되었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금성출판사본이다.

여기에 전국역사교사모임이란 이름으로 2002년 발간되어 역사과목 보조자료로 다수 채택되어 시중에서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는 대안교과서<살아있는 한국사2>도 학생들의 좌편향교육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검인정 교과서 6종과 보충 교재 1종 등 좌편향된 7종만이 전국 고교에 100% 보급되어 지금도 우리 학생들은 이 교재에 그려진대로 역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들 교재가 대부분 우리 역사를 자학하고 부정 일변도로 기술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 현행교과서가 김대중 정권 때 제작되어 노무현 정권 때부터 사용되었으므로, 두정권의 역사관을 반영하여 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만든 편수지침에 따라 집필되었기 때문이고,

둘째 한국 근현대사 연구부문에 관한 한 진보진영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관이 집필자를 통해 일제히 반영되었고,

셋째, 1980년대부터 우리 사회에 불어 닥친 민중 민족 통일사관 바람과 함께 <한국민중사 시리즈>,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해방전후사의 인식>, <태백산맥> 등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온 좌편향서적들의 범람과 좌파정권 시절 공영방송 프로그램 등에 의해 한국근현대사가 모두 반민중 반민중 반민주역사인양 수없이 매도됐고,

넷째, 일부 전교조 교사들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편향 교과서의 제작, 유통, 채택과정에 조직적으로 관여하여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켰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선 안될 나라인가”

이런 배경에서 나온 6종의 검인정한국근현대사 교과서와 1종의 보조교재는 ▲ 대한민국은 마치 태어나서는 안될 나라이며,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하여 부정의(不正義)가 승리한, 부끄러운 역사인양 교묘히 묘사되어 있고 ▲북한의 남침이 분명한 6.25전쟁도 엉뚱한 내전론과 양비론을 들먹여, 김일성의 남침도발 책임을 희석시키고 있고, ▲한국이 그동안 이론 눈부신 경제발전도 과거에 유행하던 제3세계의

종속이론의 관점에서 열강의 신식민주의를 비판하는 식의 낡은 사고를 토대로 기술하고 있고, ▲북한문제 역시 북한이 내세우는 주체사상을 비판 없이 받아 들여, 수백만의 아사자와 탈북자가 속출하는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서술을 하고 있다.

특히 보조교재로 나온 <살아있는 한국사2>는 남한의 IMF 외환위기 상황과 1인 독재체제의 결과인 북한의 비극적인 기아사태를 동일한 수준에서 바라보는 어이없는 해석이 실려 있는 실정이다.

이런 배경이 있어서인지, 최근 한국사회의 이념적 편향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증거로 ① 2004년 육군사관학교에 합격한 가(假)입교생 250명을 대상으로 “우리의 주적은 누구냐”는 질문에 무려 34%가 “미국”이라고 대답한 반면 “북한”이라고 대답한 생도는 33%였고, ② 2004년 국방부가 실시한 입대장병 의식조사 결과 75%가 반미 감정을 드러냈고 공산주의보다 자유주의가 우월하다고 대답한 장병은 36%에 불과했고, ③ 2005년 16-25세를 대상으로 한 갤럽조사에서 “만약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하면 북한을 돕겠다는 응답이 65%였으며, ④ 2002년 갤럽조사에서 6·25를 북한의 남침이라고 답한 사람은 31%에 불과했고 2004년 9월 조사에서 “우리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로 미국(39%)을 지목한 사람이 북한(33%)을 지목한 사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예시하고 있을 정도다.

“왜곡된 교과서 바로 잡아야” 교과서포럼의 탄생

이러한 젊은 세대의 이념적인 좌편향교육을 보다 못한 일부 사회과

학자들이 결집하여 2005년 1월 우선 “왜곡된 교과서부터 바로잡자”는 교과서포럼이란 단체를 창립, 활동을 개시함으로써 각계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들은 창립선언문에서 “우리 미래세대는 중고등학교에서 교과서와 참고서를 통해 대한민국이 잘못 태어났고 성장의 장애를 겪고 있는 나라로 배우고 있다. 배울 뿐 아니라 시험도 치고 평가도 받는다. 과연 대한민국의 ‘역사’는 잘못 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역사쓰기’가 잘못 된 것인가”고 묻고,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는 나라를 세우고 지키며 가꾸기 위해 최선을 다한 우리의 모습,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피와 땀을 흘린 우리의 자화상이 보이지 않는다. 독재와 억압, 자본주의 참담한 모습만 있을 뿐이다.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는 언제까지 주홍글씨가 쓰인 옷을 입고 다녀야 할 것인가”고 개탄하고 있다.

이들은 계속해서 “역사는 바로 세울 수 없다. 또 바로 세울 필요도 없다. 하지만 잘못된 역사쓰기는 바로 세워야 한다. 바로 이것이 교과서포럼이 출범하는 이유”라면서 “역사를 바로 세우기보다 역사를 바로 씌으로써 중고등학교 교육현장을 바로 잡고 말과 글로써, 강연과 책을 통하여, 또 대안교과서를 집필하고 대중서적을 발간함으로써 잘못 쓰인 교과서를 바로 잡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교과서포럼은 이어 “우리들은 대한민국의 과거를 미화하지도 않겠지만 비하하지도 않을 것이다. 당연히 우편향도 아니고 좌편향도 아니다. 오로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온 과거를 맑은 거울에 비춰 보는 것처럼 진솔하게 보고자 한다.” 밝혔다.

3년여 작업 끝에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발간

교과서포럼은 포럼 창립 3년만인 지난 3월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도서출판 기파랑)를 출간했다. “비판만 하면 뭐하나. 포럼의 대안을 내놓아 보라”는 사회일각의 주문과 학계의 요구에 대답을 한 것이다.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이 되는 올해 이 책이 출간되는데 대해 안병직(安秉直)교수는 “이제 한국근현대사는 자학사관을 바탕으로 한 민중운동사 중심의 한국근현대사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사 중심의 한국근현대사를 확립했다. 이는 한국 근현대사 연구에 있어 획기적인 업적으로서, 이제 비로소 한민족의 주된 생활터전인 대한민국이라는 한국근대국가의 형성 발전과 한국근현대사의 체계가 이론적 일치를 보게 됐다”고 격찬했다.

이 책의 책임편집을 맡았던 이영훈(李榮薰)서울대 교수는 “이 책에서 우리는 오늘날 한국인의 삶의 터전을 이루는 대한민국의 기초 이념이라 할 자유와 인권의 역사적 기원은 어디에 있으며, 그러한 이념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 나라를 세우고자 애썼던 정치세력은 어떻게 생겨났으며, 나라를 세운 후 어려운 내외여건에서도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함께 성취해온 역사적과정은 어떠한지를 기술하고 싶었다”며 “그리하여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나라의 역사에 자부심을 갖고, 나라가 세워짐에 도움을 주었던 국제세력에 감사할 줄 알고, 역사의 아픔에 대해서는 남을 탓하기보다 그것을 내면적 성찰의소재로 승화시킬 수 있는 지식인으로 성숙해 가리라고 기대하고, 그 길이 한국사회가 선진화함에 있어 피할 수 없는 진정한 도전이라고 믿었다”고 저술의 배경을 설명했다.

교과서포럼은 이어 3월에 출간한 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에서 현대사부분을 보완한 <한국현대사>를 최근 출간했다. 이 책은 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는 ‘48년에 건국된 대한민국’에 대해, 자유, 인권, 시장 등 인류가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위에 세워진 나라임을 더욱 분명히 한 것이 특징이다.

책이 나오자 사회각계로부터 뜨거운 찬반의 반응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현대사를 긍정과 희망의 역사로 쓴 것은 이 책이 아마 처음일 것이라는 반응과 함께 당장 현행 교과서에 의한 역사교육을 중단시키고 그 대신 대안교과서를 보충교재로 대체해야한다는 등 긍정적인 지적이 많았다.

반면에 역사학계 일부 학자들은 <역사비평>을 비롯한 여러 매체를 통해, “일본 후소사 교과서의 한국판 같다”는 감정적인 비난을 하는 등 조직적인 비판에 나서고 있어 앞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

영국, 일본에서도 문제가 된 자학사관 교과서

편향 역사교과서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것은 한국만이 아니다.

영국도 그랬고,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영국은 극복에 성공했고, 일본은 치유를 시작하는 단계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현행 일본헌법 정신에 따라 제정된 <교육기본법>이 개인의 존엄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일본의 역사, 전통, 문화, 그리고 가족의 유대라는 중요한 전통적 가치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논란을 벌여왔다. 즉 이 법에 따른 교육은 미래 세대들에게 자기나라의 역사,

전통, 문화에 대해 긍지를 갖지 않게 하고 그 결과, 나라의 장래를 위태롭게 할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경의와 존엄을 표할 줄 모르는, 국제감각이 결여된 인간만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런 가운데 2004년 가을, 일부 정치인들이 “영국도 자학사관 문제를 비롯한 교육황폐화문제 등 골칫거리를 대처수상이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극복했다. 우리도 영국에 조사단을 파견, 조사를 해보자”고 발의. 6명의 여야 국회의원으로 ‘영국교육조사단’을 구성, 현지 조사를 하고 교육개혁 현장리포트를 냈다.

조사멤버의 일원이었던 아베(安倍晉三, 당시 자민당 간사장대리)의원은 2년 전 일본수상이 되어, 짧은 재임기간 속에서도 일본정치의 두개 키워드의 하나인 교육기본법(다른 하나는 헌법)을 개정하는 업적을 남겼다. 이후 일본은 일본 교원노조의 영향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고, 문제의 학력저하 등 교육황폐화 문제도 점점 개선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그런 점에 유의하여, 우리도 역사 교과서문제를 포함한 교육황폐화 문제를 개선하는 방편의 하나로, 전 세계가 벤치마킹한 영국의 경험을 살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국내외의 대처수상 전기와 일본의원들의 보고서등을 중심으로 개혁내용을 대충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영국은 노예제-제국주의를 시작한 인종차별 국가”

영국에서도 1985년 중등학교(11세-14세)에서 사용되고 있던 역사 교과서가 한 보수당 정치인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어 큰 파문을 일으켰

었다.

이 교과서는 “인종차별이 어떻게 영국에서 행해져 왔는가”라는 제목 하에 영국식민지 지배의 잔학성과 그에 희생이 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사람들의 비극을 기술하면서 영국을 “노예제도와 제국주의를 시작한, 인종차별로 가득 찬 침략국가”로 규정했다.

교과서는 해골로 메워진 영국지도와 아프리카를 식민지배하는 영국을 추한 살찐 돼지로 비유하는 일러스트를 그려 넣는 한편, 영국의 상징인 국기(유니언 잭)를 인종차별의 심벌로 묘사하기도 했다.

때문에 이런 교과서로 배우는 영국의 어린이들은 자기 조상과 선조들에 대해 존경의 마음을 가질 수 없고, 영국 국민으로서의 프라이드도 가질 수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44년 교육법이 부른 교육황폐화

그런데 왜, 영국에서 이 같은 자학적인 교과서가 횡행했었던가. 그 배경에는 영국의 전후교육의 구조를 결정한 <1944년 교육법>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

1944년 교육법은 1944년 8월3일 처칠수상이 이끄는 보수당-노동당 연립내각 하에서 성립된 것이었다.

당시 영국은 독일을 상대로 국가존망을 건 제2차 대전을 벌이고 있을 때여서, 처칠수상은 전쟁수행을 위한 긴급과제만 전념하고, 국내정책의 대부분을 노동당에 위임하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교육법은 연립내각의 사회주의자인 노동당원 주도로 작성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법에는 사회주의 색깔이 짙은 정책들이 깊이 반영되었다.

첫째,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인권교육의 추진”이 내 세워졌다.. 이는 당시 노동당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교사노동자연맹이 주장해 온 것으로, 어린이의 주체성, 자주성이 과도하게 강조됨으로서, ‘잘못된 <아동중심주의>교육’이 권장되도록 되었다.

둘째, “교사의 자주성을 존중한다”는 이념을 앞세워, 이 이념이 교육행정 전반에 확립되도록 강조되었다. 당시 법률에는 교육내용과 교수방법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조항이 없었다. 그런데도 노동당은 당시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친다는 교육내용은 교사의 자주성에 위임해야하고, 국가는 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이념을 밀어 붙였다. 여기엔 교육에 대한 국가의 관여를 배제하여, 그 틈을 노려 교육계를 좌지우지하려는 좌익계 노조의 전략이 숨어 있었다.

셋째, “영국제국주의를 비판하는 역사교육의 추진”을 내세워 자학사관에 의한 편향역사교육의 기반을 마련했다. 교사노동자 연맹이 제안하고, 1926년 노동당대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노동당 지지기반인 교육조직, 학교관리자 및 지방교육당국의 멤버는 제국기념일 축하행사를 반대, 거부하고, 대신 사회주의를 비판하거나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역사교과서기사를 저지하라는 지령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합교사들은 학교현장에서 노동당좌파가 제창해온 급진적인 반인종적 차별교육을 대대적으로 부각시키는 한편, 영국의 전통적 가치와 사상을 부정하는 교육을 확산시켜 나갔다..

또 <아동중심주의>교수법이 권장된 결과, 어린이들이 좋아하고 흥미를 가질만한 ‘종합학습’ ‘체험학습’ 시간은 늘어나는 한편, 어린이들이 싫어하는, 단조로운 ‘산수연습’ ‘스펠연습’ 시간은 <주입식교육>이라

하여 배척되기 시작했다.

당연한 결과로 어린이들의 학력은 저하되어 갔고, 산업계로부터는 “지금의 영국 교육으로서는 제대로 읽고 쓰고 셈을 할 수 있는 인재가 양성될 수 없으며, 의무교육을 마쳐도 자기 이름 스펠조차 정확히 쓸수 없는 어린이가 적지 않다”는 개탄이 쏟아져 나왔다.

영국병을 앓는 유럽의 환자

게다가 이 때는, 학력저하만이 문제가 아니었고, 영국이 <영국병>을 앓는 유럽의 환자로 추락한 것이, 더 문제였다.

“70년대 당시 영국은 마치 패전국과 같았다. 도시의 큰 거리를 면해 있는 상점들은 판자를 못질하여 폐점한 곳, 대가(貸家) 매가(賣家)라는 간판을 붙인 곳이 무수히 많았다. 2차대전 후 노동당 정권에 의해 실시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정책, 주요산업의 국유화정책에 의해 영국 사람들은 완전히 일하지 않아도 되는 듯 타인 의존사회, 무책임 사회로 흘러갔다. 물가는 오르고, 실질임금은 선진국 가운데선 가장 낮고, 공공사업체의 파업은 끊이질 않고, 밤의 정전과 주유소의 폐점으로 교통은 마비되고 탄광파업으로 목욕탕은 주1회만 영업을 하고 쓰레기 수집원들의 파업으로 런던시내는 쓰레기더미에 막혀 도시기능이 자주 마비되기도 했다.

1970년, 6년 만에 노동당으로부터 정권을 탈취해 온 보수당의 에드워드 히드 수상은 우선 영국병으로 부터 탈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본적인 경제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현재의 경제혼미의 원인은, 국

영기업에 의한 무책임 한 경영과 노동조합에 대한 과도한 유화주의에서 오는 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에 있다고 판단하고 최우선적으로 노조에 대한 유화정책을 바꾸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 했다.

그러나 개혁은 실패로 끝나 버렸다. 당시 영국이 소비하는 에너지는 석탄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그리고 국영기업인 탄광노조는 영국 최대 노조이며, 정권을 뺏긴 노동당 지지의 최대 모체였었다. 이 탄광 노조와의 대결에서 히드 정권은 노조의 파업으로 에너지 공급부족상태에 빠지고, 노동당과 매스컴으로부터 호된 비판을 당하자, “누가 이 나라를 통치하는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총선을 치렀으나 패배했다. 영국을 지배하는 것이 영국정부가 아니라 노조임이 분명해진 것이다. 이때의 영국은 노조가 반대하는 개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통치 불가능한 나라였고 더 잃을 것이 없는 무력감에 빠진 나라였다.

“경제도 중요하나 思想戰서 이겨야” 대처의 등장

그러나 마가렛 대처만은 달랐다. “우리가 선거에 진 것은 보수당이 보수당으로서의 이상을 지키기 위해 명확하고 엄격한 자세를 보여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서는 사회주의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선거 패배 2개월 뒤에 보수당의 이념인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내건 싱크 탱크를 창설했다.

대처는 경제개혁만으로 영국병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범죄의 증가, 복지 의존, 경제의 붕괴, 자학적인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사상전(思想戰)>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영국병을 고치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졌었다.

당시는 사회주의가 찬미되던 시대였다. “빈부의 차를 없애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은 사회주의밖에 없다”는 프로파간다를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믿고 있었다. 아담 스미스의 나라인데도 시장경제, 민영화란 말을 쓰기 어려울 정도로 사회주의 열풍이 휩쓸고 있던 때여서, 복지정책을 후퇴시킨다고 하면, “약자를 버린다”는 비난이 일어나고, 가족의 가치를 얘기하면 “시대착오”라고 들고 일어 날것이 뻔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보수당 정책 입안자들조차, 이들의 비판이 두려워, 무사안일주의 정책밖에 제안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처는 이런 문제에 손을 쓰지 않으면 영국은 쇠퇴하여, 결국 북해에 침몰될 것이라고 판단, 영국병에 본격적으로 도전했다.

싱크탱크를 창설한 다음해인 1975년 2월 보수당 당수선거에 출마, 훌륭히 당수자리를 차지한 대처는 당수수락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옛날의 영국인들이 지금과 같이 무기력하고 무사안일에 빠졌었다라면 저 위대한 영국연방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엘리자베스1세 시대의 위험한 항해 끝에 이룩한 신대륙의 발견도 없었을 것이다. 과거 1천년에 걸친 선조들의 고투의 기억을 갖고 있는 영국이 그렇게 간단히 쇠퇴할 수는 없다. 지금이야 말로 위대한 대영제국을 만든 <빅토리아왕조의 미덕>을 회복하자”고.

영국병을 고치기 위해 대영제국을 이룩한 빅토리아 왕조의 미덕을 회복하자고 선언한 대처는 1979년 수상이 되어 관저에 들어서면서 행동으로 보여주기 시작했다.

역대 왕들의 초상화가 붙어 있던 각의(閣議)대기실에 처칠의 초상화

를, 각국수뇌를 접대하는 다이닝 룸에는, 프랑스 스페인 연합군과 싸워 대영제국의 기초를 다진 두 사람의 영웅, 넬슨과 웰링턴의 초상화로 장식했다. “대영제국이 식민-제국주의와 인종차별을 만들었다”는 당시 자학사관 풍조에 대항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편향교과서에 즉각 사용중지 명령, 그러나 실패

1985년 문제의 역사교과서 <인종차별은 어떻게 영국에서 행해져 왔는가>가 발행되어, 인너 런던 교육당국하의 중등학교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자, 대처정권은 즉각 교과서사용을 중지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실행에 옮길 수가 없었다. 1944년 교육법에 있어서는 어떤 교과서를 사용하는가는 지방교육당국과 교장의 권한이고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처는 장래 영국을 담당할 어린이들에게 자학사관만을 가르치는 사태를 계속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무엇을 가르치느냐는 전적으로 교사의 자율에 맡긴다”는 44년 교육법은 “교육을 교사에 재하청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교사에게 무책임 체질을 낳아, 공교육을 망치게 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대처는 “교육내용은 교사의 자주성에 맡긴다”는 사고를 발본적으로 고쳐, “교육내용의 대강은 국가가 책임을 갖고 정해야 한다”는 기본원칙과 교육에도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교육법개정을 밀어부쳤다..

당연히 야당인 노동당과 교직원조합, 매스컴, 그리고 교육청 관료들

까지도 “국가에 의한 교육의 통제는 곤란하다” “배외적 자국중심주의다”라고 반대를 했다. 그러나 국민의 대다수는 이 대처의 개혁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개정된 교육법의 골자는

첫째, 학생이 배워야 할 교육내용의 결정권은 교과부장관에 부여하고, 영어 수학 과학을 중핵 교과목으로, 역사, 지리, 기술, 음악, 미술, 체육, 현대외국어를 기초교과목으로 정해, 조합교사들이 스스로의 이데올로기를 가르치기 위해 이용했던 종합학습과목은 배제했다.

둘째, 국정 커리큘럼제를 도입, 중핵교가와 기초교과목을 어떻게 가르치느냐는 나라가 정하고

셋째, 국정 커리큘럼 내용에 따른 교육이 학교현장에서 정확히 행해지고 있는가를 체크하는 나라의 권한을 규정하고, 전국공통의 시험을 실시, 그 결과를 부모와 지역주민에 공표하도록 했다.

놀라운 88년 개정교육법의 효과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법이 실시되자, 검정제도가 없는 영국에서, 자연스럽게 문제의 편향 교과서는 배제되고 국정 커리큘럼에 기초한 교과서가 대부분 채택되었다. 새 제도는 또 학생들의 시험성적을 공개하도록 했기 때문에, 교사들은 자녀의 성적에 민감해진 부모와 교육관계자들로부터 새로운 압력을 받게 되었고 성적 나쁜 학생을 많이 담당하다가 저평가된 교사들은 퇴출당해야 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다. 그 때문에 교과서의 채택권을 갖고 있는 교사들도 예전과는 달리 학생들의

성적을 의식, 국정의 역사 커리큘럼에 기초한 교과서를 찾도록 된 것이다. 출판사측도 책이 잘 팔리는 것이 중요한 만큼, 교사들이 새롭게 많이 찾는 교과서를 만들게 된 것이다. 나라가 직접 교과서를 통제하지 않아도, 국정 커리큘럼에 따른 교과서가 대중을 이루고 있는 것이 오늘 의 영국이다.

영국에서는 1988년 교육법 개정 후도 교과서는 계속 자유발행 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교과서 검인정제도는 도입되지 않았다. 또한 국정 커리큘럼제가 도입되었다 해도 교과서출판사엔 그에 따른 어떠한 법적 의무도 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1988년 대처가 심혈을 기울여 개정한 교육법.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교육법에 의해 역사교과서가 개선됨은 물론 종교교육도 충실해지고 학생들의 교육수준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국민의식도 변해져, 끝내는 영국병이 극복되었음을 실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처의 교육개혁은 1997년 정권교대를 한 토니 블레어 노동당 정권에도 계승되어, 더욱 권장되고 있고, 블레어 정권은 2001년 3월 사실상의 <영국병 극복선언>을 했다. 대처가 88년 교육법을 개혁한지 13년만의 일이다.

그리고 그해 12월 블레어 정권의 한 자문위원회는 교육문제에 한하지 않고 국민전체의 의식개혁문제에 언급, “영국국민으로서의 아이덴티티와 국가에의 충성심을 기르는 것을 학교교육의 목적으로 해야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념의 싸움에 대통령이 나서야

이제 우리 사회도 역사 교과서문제로 논란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영국의 대처식 교육개혁방식을 한번 적극 도입해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떨까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오늘 우리 사회는 20여 년 전의 영국사회와 같이 노조 등 좌파 세력에 '가위놀이 사회'가 되어 버렸다. 그들이 반대하면 역사교과서는 물론 어떤 정책도 시행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교사의 자주성과 어린이의 권리존중 등을 앞세운 아동중심교육 등 평등주의에 반하는 어떠한 정책(경쟁원리가 도입된)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20여 년 전의 영국의 풍조였고, 이 풍조는 지금 우리사회와 너무나 닮았다.

1979년 영국병의 극복을 내걸고 등장한 대처는 파탄된 경제의 재건과 함께 상실된 영국 국민으로서의 긍지와 자신감을 회복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손을 댄 것이 역사교과서문제 등을 포함한 교육개혁이었다.

이명박 대통령도 교과서 문제라 하여 교과부 장관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의 진로와 깊이 결부된 문제인 만큼, 경제문제 못지않은 중요도를 갖고, 직접 선두에 서서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교과서 싸움이 아니라, 이념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교사평가제, 학생적공개 등 교육에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문제 등은 전교조, 민노총, 민노당과의 싸움뿐 아니라 사회전반의 사상전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수정에 만족 말고 새 교과서 만드는 작업에 나서라

교과부는 현재 왜곡된 현행 김인정 교과서 집필진에게 내용을 수정 하라고 권고한 상태에 있다. 해당 출판사중 금성 출판사를 제외한 5개 출판사는 교과부의 권고를 수용하려는 입장이고, 수정거부 입장이었던 금성 출판사도 조만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땀질식 미봉책인 것이다. 현행 근현대사 교과서는 팩트에도 문제가 많지만, 더 큰 문제는 사관(史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구 몇 개 고친다고 해결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교과부는 현 정책에 집착하지 말고, 반대한민국 교육은 절대 안된다는 전제하에, 지금부터 새 교과서 만드는 작업에 즉각 돌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 역사교과서가 나오게 만든 기존 편수팀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갈아 치우고, 새로운 편수자들이 먼저 올바른 지침을 만들고, 그에 따라 새 교과서를 만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교과서 서술이 또 편향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집필자나 편수팀에는 반드시 각 분야의 전문가와 사회과학자 및 중진 언론인이 참여하도록 하고, 교과서 제작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는 실명제를 도입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왜곡과 부실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